

인터뷰

“서민 일자리 창출하고 내수 살리는 건설이야말로 親복지 산업이지요”

- 회원사 만장일치로 추대 ‘영광,’ 지역 공공 건설 물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



여 환 부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신임 회장

지난 2010년 3월 여환부 중앙건설(주) 대표는 경선을 통해 전임 회장이 사임한 대한 건설협회 경남도회장에 당선되었다. 경선 열기가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이 우려되었다. 하지만 기우였다. 여환부 회장은 2년 동안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서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다짐 아래 회원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업계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대로 반영되었다. 성과도 많았다. 전국 최초로 실적공사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토록 하였고, 경남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전국에서 가장 적게 집행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일부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에 대해서는 사례 조사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여환부 회장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 회원사 대표들은 올 5월 만장일치로 그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함으로써 화답하였다. 경남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3년을 펼쳐 갈 여환부 신임 회장을 만나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과 타개 방안,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건설업계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단체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셔서 그 감회와 의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2년의 잔여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월 추대에 의해 22대 도회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도회장의 책무가 부쩍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고사(枯死) 직전이라는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매일 협회에 출근하여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만 건설업계 전체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건설 환경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회원사를 위한 협회,” “회원사와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사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들과 기업 경영에 애로를 주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남 건설업계의 숙원 사업인 건설회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회원사와 민원인들이 건설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남도회에서는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였지만 이번에는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장 선출에서 추대 방식을 취한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시도회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회원간에 갈등 현상이 초래되고 선거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 회장을 비롯하여 시도회장들도 경선 외에 추대에 의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변경되었고, 이번에 제가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장은 회원들의 신망이 높으면서 건설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는 인물을 추대하는 방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공공 및 민간 건설경기는 어떠한 상황이며, 도내 회원사들의 수주 실적은 어느 정도 인지요?

건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물량이 종전보다 몇 %가 줄었다는 등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버텨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나마 발주되는 경우 대형화되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민간 공사 또한 체감경기 악화가 투자 심리 저하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간혹 나

인터뷰

오는 민간 물량마저도 업체간의 과당·출혈 경쟁으로 수익은커녕 손해마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사 물량이 2007년 이후 계속 줄어들면서 최근 1년 간 계약을 단 1건도 못한 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 손익분기점 미달 업체가 속출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극도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업체들은 공사 현장 소재 지역에서 자재와 장비, 그리고 인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서민 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업체들이 당해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계속 외지 업체에 잠식되어 나간다면 그만큼 지방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 3월 15일까지인 지역제한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금년 1월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정책 건의했던 모든 공공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 짜 맞추기식 공사비 책정입니다. 건설업체 대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책임이 없는데도 공사를 포기하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발주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조건 없이 공사

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또한, 대형 공사 발주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일반건설업체 간에도 하도급을 자유로이 허용하는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SOC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 대형 공사에는 향토 기업인 지역 중소 업체가 반드시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도로, 학교 등 기존의 건설 물량 창출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일감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 건설업체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 공공공사 물량 확대인 만큼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대형 공사는 분할 발주를 적극 추진하여 회원사의 수주 영역을 확대토록 하고,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사업과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 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사업, 경상대 건립 공사 등 향후 지역 대형 공사에 도내 업체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무면허 시공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근절책을 강구하고, 건설 투자가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수

“SOC 예산을 아껴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건설 투자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있도록 본회와 연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 물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SOC 등 건설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과 복지는 대립 개념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분야라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마치 복지의 '적'인 양 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이야말로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형 산업이고 내수를 살리는 데 가장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생계 유지에 직결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 계층의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게 되어 일자리를 잃은 건설 근로자들은 복지 방안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설로 인해 상수도가 공급되고, 밤늦게 응급 환자가 육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건설의 힘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종합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사글세를 전전하던 서민들이 공공 임대아파트의 당당한 주민이 된 것도 건설로 인한 복지 파급 효과입니다. 무상 급식이나 단순한 지원금, 보험 등 '무상'을 통한 온정적 도움만으로는 궁극적인 사회 복지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의 원천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국형 복지입니다. SOC

예산을 아껴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건설 투자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건설업자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때때로 지나친 공세에 시달릴 때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정부패의 특성상 한 쪽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건족·삼질족이라는 단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 이슈화되어 생겨난 조어입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나 장학재단 운영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회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지급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주요 대학 건설 관련 학과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건설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이나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내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하여 건설 현안 이슈 및 애로 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